

# 여야, 北금강산 관광시설 철거에 유감

### 與 “남북교류협력 적극 나서야”

### 野 “정부 대북인식 한계 드러내”

여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일대의 남측 관광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해 23일 일제히 유감을 밝혔다.

여당은 북한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남북 대화가 시급하다고 했고, 야당은 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남북 교류와 평화의 대표적 상징인 금강산 관광인 만큼 북측 조치는 안

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북제재, 북미대화 난항 등으로 남북교류가 답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던 상황적 한계도 없지 않지만, 오랜 시간의 반목·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길에는 남북 모두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지금이라도 남과 북은 차분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남북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진척시키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북은 물론, 우리 정부 역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을 향한 교감 없는 일방적인 짝사랑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안이하고 속얕은 대북 정책을 할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을 구축할 시간을 벌었다”며 “국민은 더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쇼에 속지 않는다.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인한 참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우리가 ‘너절한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대북정책으로 답해야 한

다”며 “문 대통령이 그려야 할 청사진은 ‘북한의 밝은 미래’가 아닌, ‘대한민국·한반도의 밝은 미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인식 한계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끊임없이 싫다고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평화경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누구 고집이 더 센지 겨루는 사이 우리 국민들의 근심만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올바른 남북 관계는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안일한 착각 속에서 쌓아 올린 장밋빛 청사진은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갈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중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북한은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변영의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는 길로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더욱더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북한은 남한에 분품이나 할 때가 아니다. 금강산은 겨레의 공동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남북 상생의 길로 나오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을 철거하는 것은 선부른 결정”이라며 “남북 교류의 문을 걸어 잠그는 공세적 조치들은 평화를 가로막는 철조망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법무장관에 한 발 더 나간

## 전해철 “검증절차 우려 없어”

경기도의회 민주당 정치아카데미서 자신감 피력

유력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해철 국회의원이 “최종 후보가 아니지만 검증 절차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근 국회에서 밝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진전된 발언이다.

전 의원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3강 강사로 나선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협치의 제도화’를 주제로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강연

말미에서 전 의원은 “제가 선출직으로서 선거를 하면서 자세한 검증을 떠나 저에 대한 많은 부분이 평가됐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가 되면 청와대 검증 절차를 통해 미흡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는데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보는 것 등에 대한 위축은 전혀 없다”고 자신했다.

후보로 나설 지에 대한 확답은 없었지만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성공과 협치의 제도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어 “저는 국회나 당에서 일하고 싶지만 당과 청와대 참모들의 직·간접적인 권유와 만류가 5대5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검찰개혁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무장관직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검찰개혁 실무협의 참석한 송기현·권성동·권은희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실무 회의를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계엄령’ 논란…지지율 회복 나선 한국당 발목 잡을까?

한국당, 문건 공개 임태훈 고발 하는 등 강경 대응 나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겨우 끌어올린 당 지지율이 계엄 논란에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당은 당장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고발 조치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을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당시 작

성된 계엄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의 ‘계’ 자도 못 들어봤다”며 “(임 소장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황 대표가 (계엄문건)을 몰랐다면 무

능한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발빠르게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고발을 통해 해당 문건을 제공한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뉴스1

뉴스1

## “윤석열 속고 있다” 유시민에

## 대검 “허위발언 멈춰라” 불쾌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조국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유 작가(이 사장)는 지난 2일 언론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 한 주장에

관해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로서 조속도 이렇게까지 안 한다’는 비관과 관련, “조 전 장관 동생 수사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지난 8월22일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해 보도했고,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며 “별건 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